

정당 여성공약 실현가능성 희박

각 당 전국구 공천 결과 여성공약 첫 실험대 될터

말 뿐인 공약 선별, 표 향방에 반영해야

4.11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내건 여성공약으로 표의 향방을 결정 짓고자 하는 여성유권자들은 여성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에 귀 기울여 볼만하다. 노동, 인권, 정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을 대비해 정당이 내건 여성공약의 실현가능성이 우려될 만큼 낮다고 진단하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여성유권자연맹(회장 조선희)이 주최한 '제15대 총선을 대비한 각 정당 여성정책 공청회'에서 정치, 노동, 인권, 보육 부문에 있어서의 정당의 공약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정당의 여성공약이 과거에 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여전히 '실행가능성이 낮은 장미빛 공약'이 많다고 진단했다.

여성후보 당내 발굴해야

이날 공청회에서 정당의 여성정치 부문 공약을 분석해 발표한 백영옥 교수(명지대 북한학과)는 "정치권에서 소외되었던 여성의 문제를 공약의 한 부분으로 제시하고 여성정책에 관한 여론의 형성과 조직화에는 세당이 모두 기여했다"고 평가했으나 "각 정당이 내건 공약의 약속이행여부와 실현가능성에는 많은 의문이 따른다"고 밝혔다.

백 교수가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표한 각 정당의 정치부문 공약은 첫번째로, 후보 공천시 여성을 우대하겠다는 조항이다. 신한국당의 경우 2백 53명의 지역구 공천자 중 여성을 단 한명 밖에 공천하지 못했다. 여성당원이 전체 당원의 70%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각당 여성공약 분석 공청회.

여권지향적인 여성유권자의 성향으로 선거시 여성표를 더 많이 받아왔던 여당에서 그동안 경쟁력 있는 여성후보를 한명 이상 키우지 못한 점을 볼 때 공약으로 내건 여성후보 양성을 위한 장기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가 내려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다만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석의 57%를 여성에게 할당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발표될 전국구 후보 명단을 보고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신한국당의 공약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여성인권 문제 통합적 접근 필요

국민회의는 다른 당에 비해 가장 많은 지역(5개)에 여성후보를 공천했으며 추미애 후보 등 여성후보 발굴에도 기여했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공천이 곧 당선은 아니기 때문에 후보의 당선을 위한

당의 배려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이 백 교수의 지적이다.

민주당은 전국구 인원 후보자 명단의 1-10번 사이에 남녀 후보를 반반씩 11-20번 사이에 남 30%, 여 70%를 공천하겠다고 해 각당의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약 중 가장 구체

각당 여성인권 부문 개별과제 제시에 치중 베이징 행동강령 실행의지 전혀 없어

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정치 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지역구 여성출마자가 한사람에 불과해 전국구 여성후보 공천의사가 그대로 실현되는지 역시 주시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백 교수가 지적한 두번째 사항은 각 당에서 경쟁적으로 내건 여성고용할당제와 인센티브제도 도입이다. 공직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신한국당은 5급, 7급에 여성채용 목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여성공무원 할

당제를 도입해 5급, 7급 공무원 여성합격자의 비율을 제고, 2천년까지 20%로 올리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공직사회의 반대여론을 어떻게 뛰어넘을지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실행가능성을 높게 채점할 수 없다는 지적

이다.

각 당의 여성인권 부문의 공약을 분석한 이상덕 한국여성정의 전화 상임부회장은 전체적으로 각 당의 공약이 여성인권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부분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베이징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한국여성NGO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에는 한국적 상황에서의 여성인권유린의 현장을 ▲가정 내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 ▲성폭력 ▲매매춘 ▲인신매매 ▲일본군위안부 문제 ▲주한미군에 의한 여성 폭력 ▲퇴폐적인 성산업 ▲외국인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여성장애인 인권 문제 ▲태아성별 검사 후 여아를 낙태시키는 문제 등이 지적

됐다고 소개했다.

이 부회장은 그러나 각 당의 여성인권 부문 공약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항이 거의 부재, 결과적으로 각 당이 한국여성운동 내에서 제기되어 왔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진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또 여아에 대한 폭력이나 성착취, 성적학대, 보건의 국제적 인신매매 등 제4차 베이징 여성회의의 행동강령에 제시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도 각 당의 공약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법제정에 대해 각 당이 공약으로 채택한 것은 현재 여성, 시민사회단체의 중요 쟁점이 되고 있는 점에서 고무적이거나 이와 관련한 신한국당의 공약은 '제도마련'의 수준이어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각 당의 여성고용안정과 고용평등 부문의 공약을 분석한 왕인순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사무국장 역시 각 당의 공약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아 현실화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왕 사무국장은 "신한국당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보호하며 비정규직 고용확대를 규제하겠다고 했으나 어떤 규제 조치와 어떤 보호조치를 제안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3일 각 당의 여성공약을 분석, 발표했다던 한국여성정치연구소(소장 손봉숙)도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내걸고 있는 정당에서 여성후보자를 공천하는 데 극

히 인색한 것은 공약에 대한 실천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을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연구소는 여당이 제시하고 있는 가족법 개정 같은 공약은 14대 총선, 14대 대선 때도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이번 총선에 다시 공약으로 올라있어 공약의 재탕, 삼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치연구소는 민주당이 동성동본불혼금지를 8촌까지 제시하고 있으나 12촌까지 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제언했다. 정치연구소는 또 여성복지정책과 관련한 공약은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재원의 확보가 요구되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여성관련 복지정책을 수행하자면 국가정책에서 우선순위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약 재탕 지양 해야

정치연구소의 손봉숙 소장은 "여성정책에서 정당 간의 뚜렷한 차별성이 없어서 여성정책을 보고 투표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구 후보자가 제시한 여성관련 공약을 검토하여 성평등 시각을 가진 국회의원 대표로 선출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 등, 이하 여연)도 지난 12일 '15대 총선과 10대 여성정책'을 선정해 발표했다. 여연이 각 당에 제언한 10대 여성정책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여성부 신설, 복지예산 2천년까지 GDP(국내총생산) 대비 5% 확대, 여성노동자 고용촉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산전산후휴가 90일 확대, 여성할당제 실시, 성폭력특별법 개정, 여성농민 보호정책, 가사노동가치 인정, 보육시설 확충 등이다. 여연은 "여성유권자들이 친여성적인 국회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10대 여성정책을 마련했다"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에게도 이 내용을 근거로 공약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금희 기자>